

【2019 ‘평화의 책’】

수상소감

## 3·1운동의 세계, 3·1운동의 봉기 대중

『3월 1일의 밤: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

(권보드래, 돌베개, 2019)

권보드래 (고려대학교)

### ‘평화의 책’이라는 이름

‘평화’란 단어에는 안심시키는 힘이 있다. 언어가 오용되고 남용돼 온 역사를 ‘평화’라고 어찌 피할 수 있으랴마는, ‘평화’를 발음할 때의 갈망과 기대는 그런 역사를 이겨낸다. 『3월 1일의 밤』(돌베개, 2019)은 올 3월 출간 당시부터 ‘평화’를 품는 행운을 누렸다.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이란 부제를 달 수 있었던 덕이다. 이 표현은 본래 작은 절 제목에 불과했던 것을 편집자가 찾아 부제로 제안해 준 것인데, 제안을 들었을 때 뭉클 기뻐했던 기억이 난다. ‘평화’란 말로써 3·1운동이, 그리고 이 책이 단단한 핵심을 얻게 된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1월, 『3월 1일의 밤: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제6회 ‘평화의 책’에 선정됨으로써 두 겹으로 ‘평화’를 누리는 명예를 얻게 되었다. 오래 기억하게 될 명예다.

### 3·1운동 100주년, 시각의 전환

3·1운동 100주년이었던 만큼 2019년에 3·1운동 관련 저작은 풍성했다. 한국역사연구회에서는 총 다섯 권짜리 총서 『3·1운동 100년』(휴머니스트)을 선보였고, 창작과비평사에서는 『촛불의 눈으로 3·1운동을 보다』(이기훈 기획)를 펴냈으며, 그밖에 『만세열전』(조한성, 생각정원)이나 『오늘과 마주한 3·1운동: 민주주의의 눈으로 새롭게 보다』(김정인, 책과함께), 『1919: 대한민국의 첫 번째 봄』(박찬승, 다산초당) 등이 나왔다. 3·1운동 70주년에 『3·1 민족해방운동연구』(한국역사연구회, 청년사, 1989)라는 논문집이 3·1운동에 대한 민중론적·계급론적 시각을 제안한 이래 실로 30년 만에 3·1운동에 대해 본격적으로 토의할 기회를 가졌다는 생각이다.<sup>1)</sup> 그 사이에도 『3·1독립운동의 지방시위에 관한 연구』(이정은, 국학자료원, 2009)를 비롯한 탄탄한 연구가 이어졌고 『1919년 3월 1일에 묻다』(박헌호·류준필 편, 성대 출판부, 2009) 같은 집합적 연구성과도 나왔으나, 그를 통해 지역사와 문화사라는 새로운 연구시각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1운동에 대한 근본적 시각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sup>2)</sup>

1) 역시 같은 해 나온 논문집으로 3·1운동에 대한 민족주의적 시선을 계승하면서도 북한·만주·러시아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려 한 『3·1운동과 민족통일』(동아일보사, 1989) 또한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2) 나 또한 저자 중 한 명으로 참여했던 『1919년 3월 1일에 묻다』에 대해서는 몇 마디 덧붙여 두고 싶다. 이 책은 800쪽 넘는 두툼한 분량 중 태반을 3·1운동이 어떻게 기억·재현돼 왔는가 하는 점, 즉 메타역사적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 3·1운동에 대한 이념적·인식론적 전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각의 우회로를 그렇게 찾았다 하겠다. 역사 전공자들이 독담(獨擔)했던 3·1운동 연구에 문학·사회학·종교학 분야의 필자가 대거 가세했다는 사실 또한 이 책의 특징이다. 그만큼 한국학의 연구 지형이 변화했음을 알려준 책이라 하겠다.

반면 올해 나온 저작들은 3·1운동을 해석하는 시각에 있어 민주주의적·공화론적 전환을 뚜렷이 보여준다. 비단 연구자들 사이에서의 사정은 아니었던 듯하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공식 홍보문구는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였고, 국립중앙박물관의 전시('황제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등 기획 행사에서도 비슷한 시각이 자주 드러나곤 했다. 3·1운동이 오랫동안 민족주의 일변도로 해석돼 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적잖은 변화다. 20세기 내내 민족주의·근대주의가 한반도의(한국의) 역사 해석을 지배해 온 가운데, 3·1운동은 근대주의마저 삼투하지 못하는 독특한 대상이었다. 그런 해석의 시도가 없지는 않았으나, 근대주의의 요체라 할 경제·정치적 성장의 서사가 3·1운동에 일관되게 적용된 일은 드물었다는 뜻이다. 아마 고종의 죽음에 기폭제 역할을 한 까닭이 클 터인데, 3·1운동 해석에는 진작 시효를 다한 근왕주의마저 혼란스럽게 얹혀 있곤 했다.

그런 만큼 올해 나온 저작들이 "민주주의를 위한 모든 투쟁의 앞에 3·1운동이 있다"는 의식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징적이다. 특히 2016년의 '촛불 시위'와 3·1운동을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촛불의 눈으로 3·1운동을 보다'란 표제의 책까지 출간됐으니 말이다. 3·1운동 연구뿐 아니라 역사학계의 최근 근·현대사 연구 중 공화론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을 전면화한 사례는 드물지 않았다(박찬승,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돌베개, 2013; 김정인, 『독립을 꿈꾸는 민주주의』, 책과함께, 2017). 2016년의 경험으로 집약되는 지난 10여 년—더 길게는 1987년 이후 30여 년—'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다단한 경험이 마침내 역사를 보는 시각을 바꾸어 낸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민주를 갈망하면서도 민주주의를 잘 알지 못했던 개발독재기를 지나, 이제야 말로 민주와 공화에 대한 욕구, 그것을 알고 또 살고자 하는 욕구를 절실

히 느끼고 있다는 증거라 해도 좋겠다.

『3월 1일의 밤』 또한 올해 나온 3·1운동 관련 저작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 1987년의, 2002년의, 2016년의 경험이 이 책에는 녹아 있을 것이다. ‘나가는 말’에서 “지긋지긋해 하면서도 열렬하게 한반도를, 대중을 사랑하는, 자기 자신을 그것과 분리시킬 수 없는 능력 혹은 무능력”에 대해 썼거니와, 궁·부정적인 의미에서 모두, 엘리트의식과 지식인의식을 가질 수 없었다는 사실이 내 공부의 토대였다고 느낄 때가 많다. 기묘한 대중주의라고 해야 할까, 감상적 내재주의라고 불러야 할까, 내게는 언제나 한반도 근현대사, 그 속의 대중이 원근법의 확고한 중심이다. 서양 근대에 대한 콤플렉스가 약한 한편 한반도-대안에 대한 소명의식도 부족하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풍토에 이식된 서양이 아닌가”(최인훈, 『회색인』)라거나 “이 민족이야말로(...) 수난의 여왕이다”(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라는 의식에 영향 받은 이력이 희미하다는 뜻이다. 한반도는 모방-미달의 사례가 아니라 동등한 유사 사례 중 하나라는 인식, 한반도 근현대사는 대중에 의해 주도되면서 무수한 문제 속에서도 기적 같은 성취를 이루어 왔다는 판단— 20대 이후 이런 실감은 점점 강력해져 왔다. 그런 개인적 실감에서 1987년 이래 최근사의 자취를 읽어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공교롭게도 2019년 3월만 해도 ‘전 국민적’이란 과장이 통할 법했던 낙관적 자부심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거의 꺼져버린 듯하다. ‘1987년이 2016년으로 완성됐다는’ 자기도취적 역사의식의 취약성이 그로써 증명되었다 해도 과한 독설은 아닐 것이다.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포함한 근대 세계의 의제를 성찰하고 필요하고-가능한 미래를 모색해 가는 길은 과연 녹록치 않다. 상상력이, 현실감각이, 기준과 자원이 필요하다. 올해 3·1운동에 대한 시각전환을 견인한 민주주의적·공화론적 시각만 해도 얼마나 많은 논란의 여지를 지니고 있는가. ‘만인의 평등한 권리’를 존중

하는 민주주의와 ‘참여의 의무와 권리’를 중시하는 공화주의 사이 분기의 문제도 있고,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사이 해묵은 논쟁이라는 주제도 있다. 2011년 미국의 월스트리트 점거나 2016년 한국의 촛불시위는 ‘거리의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새삼 증명하는 듯했지만, 예컨대 독일 바이마르공화국의 경험이 낳은 소수의견, 즉 “임기 동안 유권자의 압력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의민주주의의 엘리트적 핵심이야말로 직접민주주의의 무질서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보았던 의견의 설득력<sup>3)</sup> 또한 지금도 부족하지 않다.

물론 3·1운동의 봉기 대중은 ‘민주주의’라는 말에도, 그 쟁점에도 거의 무지했을 터이다. 끝내 의회가 구성되지 못했던 것이 1910년 이전 한 반도의 근대사였으니 말이다. 이른바 ‘민족대표 33인’을 비롯해 대표임을 자임하는 사람들의 출현을 3·1운동을 통해 흔하게 목격할 수 있지만, 이들이 ‘대표’라는 말로써 주장한 내용은 단순치 않다. 그들이 주장한 ‘대표’는 대의민주주의의 이하이자 이상이었다. 1890년대 이후 접해온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이 이들의 ‘대표’ 개념에 깔려 있었겠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대안의 모색 또한 선취돼 있었다. 세계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갈망과 불만이 함께 고조되고 있던 시기였음을 생각하면 3·1운동에서 ‘대표’의 문제성은 더욱 커진다. 대표의 개념을 위반하는 대표, 그 자체 배리(背理)로서의 대표들이 3·1운동을 통해 출현했다고 해야 할까. 그것은 1910년대 조선 사회의 ‘전근대적’ 면모가 ‘근대 너머에의’ 실험과 겹치는 장면이었다. 다양한 층위 ‘비근대(unmodern)’<sup>4)</sup>들이 교차하는 이런 장면은 3·1운동의 벡터가 실로 복합적이었음을 상징해 준다.

3) 우디 그린버그, 이재욱 옮김, 『바이마르의 세기』 (서울: 회화나무, 2018), 제 4장 참조.

4) 1차 세계대전 연구자인 제이 윈터의 용어를 빌어온 표현이다.

## 세계사적 지평 속에서의 3·1운동

『3월 1일의 밤: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은 무엇보다 3·1운동을 세계사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려 노력했다. 잘 알려져 있듯이 3·1운동은 1차 대전 전후 세계적 대변동의 일환이다. 변동의 범위는 실로 컸다.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투르크 제국이 해체되고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으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탈식민 민족해방운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1차 대전 패전국 영토를 중심으로 다수의 신생 독립국가가 생겨났다. 아일랜드와 인도와 이집트, 중국과 조선 등 승전국의 (반)식민지에서도 봉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젠더적·계급적 위계 또한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제연맹이 탄생하고 세계노동기구가 조직되었으며 여성 참정권이 채택되고 8시간 노동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과문했던 터라, 어쩌면 상식이라 할 이런 세계사적 변동을 처음부터 인지했던 것은 아니다. 3·1운동을 추적하다 차츰 1차 대전 전후의 전 지구적 변동에 눈 뜨게 된 데 가깝다.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체제의 기원이 1차 대전 무렵에 있다는 생각 또한 하게 됐다.

지구화 시대의 개막, 민족국가 체제의 보편화, 사회주의 정치체제의 탄생, 모더니즘의 출현 등— 1차 대전 전후의 변동으로써 개시된 시대를 이렇게 특징지을 수 있다면, 그 시대는 지금 바야흐로 해체되는 도중에 있다. 2차 대전 후 냉전과 이념 대결이라는 재편 과정을 통해서도 지속되던 1차 대전 전후 변동의 영향력이 이제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해도 좋겠다. 돌이켜보면 3·1운동은 당시의 대변동 속 하나의 고리였다. 3·1운동은 1차 대전 직후의 유토피아적 기대와 그 후의 환멸에 공명하면서 다양한 의제에 대한 사고·실험을 공유했으며, 그런 만큼 오늘날 ‘20세기로부터의 출구’를 모색하는 데 있어 풍부한 자원이 될 수 있다. ‘대표’ 개념뿐 아니라 언어와 정치, 폭력과 평화, 젠더와 노동 등의 문제를 사유하

는 데 있어 3·1운동은 실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펼쳐 보여준다. 3·1운동 속의 작은 문제를 탐색하다가 세계사적 지평에 도달하곤 한 것은 『3월 1일의 밤』을 쓰면서 번번이 부딪힌 회로다. “오등(吾等)은 자(茲)에 아(我)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라는 「기미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을 궁금해하다 1차 대전 전후 수십 개 민족이 발표한 수 천 종 선언서를 만나게 됐던 것처럼. 또는 왜 3·1운동의 봉기 대중이 무기 탈취를 기도하지 않았는지 조사해 가다 19세기 말 이래의 여러 갈래 폭력론·평화론을 조우했던 것처럼.

바야흐로 세계가 하나로 연결돼 가고 있던 무렵이다. 식민지 병사들이 제1차 세계대전의 유럽 전장에 동원되고 조선인들도 적잖은 수가 전장에 참여했던 시절이기도 하다.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독립이 완성됐지만 아시아·아프리카에서는 민족해방이 막 논의되기 시작했고, 유럽 내부에서는 민족주의와 테러리즘이 동시에 번성하고 있었다. 3·1운동의 참가자들은 이런 전 지구적 사례에 민감했다. 특히 초기 주동자들이 그러했다. 한용운은 「조선 독립의 서(書)」(1919)에서 독일혁명과 폴란드·아일랜드·체코슬로바키아 독립선언을 거론했고 박은식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에서 벨기에·그리스·이집트의 사례를 들어 한민족을 격려했다. “침략자의 압박하에서 신음하던 민족은 (...) 독립·자결을 위해 분투하게 되었으니 폴란드의 독립선언이 그것이요, 체코의 독립이 그것이며, 아일랜드의 독립선언이 그것이고, 또한 조선의 독립선언이 그것이다.” “오늘날 이집트의 독립운동을 보면, 노동자는 파업하고, 상인은 철시하며, 학생은 동맹휴학하고, 관리들은 사직하는 등 각종 위험한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자 영국인들이 결국 그 통치력을 잃고 독립을 허용하였다.”

책을 쓰면서 종종, 어쩌면 오늘날 우리 시야가 3·1 운동 당시보다 좁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분단과 전쟁을 겪으면서 미국 중심 세

계절서에 편입되고 냉전과 반공 속에 상상력마저 위축되면서 우리는 3·1운동의 그들보다 더 작은 사람들이 된 게 아닌가. 3·1운동을 ‘외교론적 의존’이나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오해’로 비판할 때 그들이 아닌 우리의 시야를 기준 삼은 건 아닌가. 3·1운동의 대중은 민족자결주의 자체보다 그런 노선을 불러온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등의 투쟁에 깊이 영향 받았다. 물론 그런 상황을 인정하고 그것을 민족자결주의로 명명한 것은 미국 대통령 윌슨이었으나<sup>5)</sup> 3·1운동 참여자들은 보다 빈번하게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를, 그리고 인도·핀란드·아일랜드·아이슬랜드 등을 언급했다. 윌슨과 미국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그보다 약소국의 민족해방운동이 성공한 사례에 고무됐고, 열강이 선전한 평화주의를 신뢰했지만 그에 앞서 평화를 요청하고 변혁을 요구했다. 3·1운동의 대중은 그런 변화를 지지하고 촉구한 일종의 ‘예언자적 대중’이었다.

### 3·1운동의 봉기 대중, 그 현재적 의미

3·1운동의 ‘예언자적 대중’은 그러나 동시에 평범한 갑남을녀들이었다. 『3월 1일의 밤: 폭력의 세기에 꾸는 평화의 꿈』에서는 3·1운동 속 봉기 대중의 예언자적 면모와, 그것과 공존했던 생활세계적 이해관계를 둘 다 전달해 내고 싶었다. 독립선언 소식을 듣고 만세소리 외치는 군중을 목격하며 ‘이미 독립’했다고 생각한 사람들— 그들은 ‘독립’된 나라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품었던 모든 불평과 원망이 해소되리라 생각했으며, 독립 후 불리한 처지에 놓일까 전전긍긍하며 주변에 시위를 독려하기도

5)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보다 레닌의 민족자결주의가 앞섰고, 해외 식민지를 포기한 혁명 후 카라한 선언이 보여주듯 그 실천에 있어서도 앞서 있었다는 마땅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3·1운동기 조선인들 사이에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은 미국 대통령 윌슨의 이름과 그로써 상상한 노선이었다.



했고, 각출해 시위 자금을 마련하면서 성대한 시위를 위해 인력거나 자동차를 빌릴 것을 계획하기도 했다. 그들에게 있어 자기중심적 이익 추구하고 공동체를 향한 헌신은 모순 없이 공존하지 않았나 싶다. 개인적 성공을 위한 분투를 전체의 선을 증진시키려는 노력 속에 기꺼이 합류시키면서, 그들은 총칼에 맞서면서도 ‘순교’보다 ‘영생’을 실감했을 것만 같다. 『3월 1일의 밤』은 의식적으로 이런 모순의 공존에 초점을 맞추었다. 숭고한 민족주의적 이념과 영악한 이익 동기가 한 몸에 깃든 장면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그러니 모든 존재를 하나의 의미로 환원시키려 들지 말자고, 존재 자체의 복잡다단한 양상에 먼저 주목해 보자고 제안해 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존엄한 생애도 무수히 목격했지만, 나와 한 치 다를 것 없는 갑남을녀들이 그럼에도 자기를 넘어설 때 그 앞에서 느끼곤 했던 경탄의 정을 더 중요하게 간직하고자 했다.

세계사적 지평으로 좁아옴했다 하잘것없는 갑남을녀의 생애로 좁힌하길 거듭하면서<sup>6)</sup> 『3월 1일의 밤』은 결국 민족주의라는 문제를 우회해 버린 셈이다. 전체성의 구도와 대표-매개의 기획이 시효를 다해가고 있고, 그런 만큼—네그리·하트의 진단마따나 ‘국지적 문제가 단숨에 보편적 문제로 비약하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아주 크거나 아주 작은’ 존재에 대한 새로운 측량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까닭이 컸다. 그러면서도 3·1운동을 통해서는 ‘모든 존재를 감싸는’ 공동체적 순간에 대한 향수를 자주 느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나가는 글’에서 쓴 대로 “대결할지 언정 누구도 추방하지 않는 세상”, “죄를 묻고 벌을 정해야겠지만 궁극에는 모든 존재를 품는 그런 질서”와 3·1운동을 겹쳐 보곤 했다. 3·1운동

6) ‘좁아옴’과 ‘좁인’이란 『3월 1일의 밤』에 대한 블로그 서평의 일절에서 빌려온 표현이다. <https://blog.naver.com/msg2012/221627902531>

기록을 살필 때, 봉기 대중 사이 경제·사회적 갈등이 거의 문제되지 않고 일본인에 대한 적대마저 억제되곤 하는 면면은 두고두고 놀라웠으니 말이다. 3·1운동은 ‘적대성 안에서 적대성을 넘어서려(within antagonism, beyond antagonism)’ 한 예외적 사건이다. 비록 그런 면모가 정치적 무지에 의해 조장된 바 있었을지라도, 3·1운동 후의 테러리즘과 노동·소작쟁의가 3·1운동의 ‘평화’의 반면이었다 할지라도, 1919년 봄 몇 달 동안 ‘혁명’과 더불어 ‘평화’에의 지향이 그렇듯 생생했다는 사실은 쉽게 잊히지 않는다.

3·1운동의 주역보다 3·1운동에 참여한 무명씨들에 더 관심을 기울인 것도 3·1운동을 ‘모두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싶어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총 16개에 달하는 매 장 첫부분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인물의 생애를 하나씩 보여주고자 했는데, 그 대부분은 3·1운동의 단순 참가자에 불과하다. 3·1운동 이후 행적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던 사람도 많다. 그렇듯 주변적 존재에서도 3·1운동의 화인(火印)을 읽어내고자 한 것이 『3월 1일의 밤』의 특색 중 하나다. ‘3·1운동과 대구의 문학청년들’이라고 하면 이상화나 백기만을 떠올리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이 책에서는 그런 축보다 3·1운동에 불참했던, 뿐만 아니라 3·1운동 이후 젊은 세대가 이념화돼 가는 행로에 저항했던 이장희 같은 시인에 주목해 보고자 했다. 3·1운동과 무관해 보이는 그의 ‘고립과 자유와 독행과 오만’의 생애마저 3·1운동이 열어젖힌 사회적 존재방식 위에서 가능했다고 보고, 그 사실을 논증하고자 했다. 그만큼 3·1운동이 한반도의 근대사에서 절대적인 사건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3·1운동은 한국전쟁과 더불어 한반도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강력한 불회귀점이다. 책에서 쓴 표현을 빌자면, 3·1운동은 “중착점보다 출발점이라는 시각에서 적극적 의의”를 갖는 사건, “실패냐 성공이냐의 질문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종류의 사건”이다. 다케우치 요시미가 메이지

유신과 5·4운동을 비교하면서 던졌던 질문, 즉 ‘성공으로써 실패한’ 혁명과 ‘실패로써 성공한’ 혁명이라는 문제의식을 떠올려도 좋겠다. 근대 한반도의 역사에서 3·1운동은 “그것을 부정한다면 ‘나’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존재의 기초이자 폭발적 성장의 계기”다. 3·1운동은 실로 다양한 욕망과 의제를 높은 강도로 폭발시켰다. 그러나 토론과 시행착오를 통해 구체화되었어야 할 그 욕망과 의제들은, 식민지라는 상황에서 굴절되고 유보될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난립했던 정당들이나 독립운동 내 노선투쟁이 보여주듯 3·1운동의 후예들 사이 상쟁(相爭)의 역사는 실로 각박했다. 해방 후, 건국 후, 그리고 1987년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갈등의 역사는 착잡하다. 적대와 갈등의 불가피성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생산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라도 3·1운동의 유산을 좀 더 골똘히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언어와 정치와 대표와 평화의 문제를 다시 사유하는 데 있어, ‘근대 이후, 냉전 이후’를 모색하는 데 있어 3·1운동의 발굴과 재발견은 유용한 기반일 수 있을 것이다. 3·1운동은 실로 경이로운 사건이었으나 좁은 해석 회로 속에서 그 생명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다. 이제는 새롭게 읽고 새롭게 배울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다시 발견하고 다시 읽는 시선 아래서 세계는 신생한다.

#### 권보드래(Kwon, Boduerae)

서울대 국문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에 재직 중이다. 근대 초기 ‘소설’ 개념이 형성된 과정을 추적한 박사학위논문(초록)에 기초해 첫 저서 『한국 근대소설의 기원』을 낸 이래 19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각종 기록문서와 신문·잡지, 문학 자료 등을 탐색하면서 한국 근·현대 정치·사회·문화의 굴곡을 추적하는 데 주력해 왔다. 저서로 『연애의 시대』, 『1910년대, 풍문의 시대를 읽다』, 『1960년을 묻다』(2인 공저) 『신소설, 언어와 정치』 등이 있다. 최근에는 20세기 세계문학의 구조 속에서 한국문학을 다시 읽는 작업을 시동 중이며, 냉전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분단기 한반도를 재조명하는 데도 관심을 두고 있다.